

제246호 (2010. 2. 15)

■ 건설 경기

- 전국 미분양 주택 2개월 연속 증가

■ 정책·경영

- “각종 규제 완화해 경색된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해야”
- “2030년에는 세계 3대 원전 강국으로 도약”

■ 정보 마당

- 오바마 행정부 금융개혁안-검열 제한 등 강력 규제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원전 숙련기능공 양성 서두르자”

전국 미분양 주택 2개월 연속 증가

- 전체 미분양의 40%가 악성 미분양(준공후 미분양), 수도권에서도 큰 폭 증가 -

■ 2009년 말 분양 물량 집중 영향

- 2009년 말까지의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12만 3,297호로, 전월 대비 0.6%(755호) 증가
 - 수도권에서 12.3%(2,802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1%(-2,407호) 감소함.
 -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2,852호), 충남(129호), 경북(283호)에서 전월 대비 증가했으며, 시군구 중에서는 고양시(2,751호)에서 특히 많은 물량이 증가함.
 -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이 전월 대비 0.7%(885호) 증가, 공공 부문이 28.0%(130호) 감소
 - 규모별로는 전월 대비 중소형(85㎡ 이하)에서 증가했으며(60㎡이하 : 32.2%, 60~85㎡ : 6.4%), 대형(85㎡ 초과)은 2.0% 감소함.
- 미분양 주택은 2009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 시점 (2010.2.11)이 다가옴에 따라 분양 물량 급증과 함께 같은 해 11월부터 증가세를 보임.
 - 이는 2009년 9~12월 기간 동안 2009년 분양 물량의 58.8%인 13만 4,360호가 분양되는 등 분양 물량의 집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올 1월 분양 물량이 약 2만 5천여호로 예상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지속될 전망

■ 수도권에서 큰 폭 증가 추세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5만 87호로, 전월 대비 2.1%(1,012호)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7.8%(3,611호) 증가함.
 - 수도권에서 전월 대비 12.0%(345호), 지방에서 1.4%(667호) 증가
 - 부문별로 살펴보면 13채를 제외한 모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민간부문임.
 - 규모별로는 85㎡ 초과는 전월 대비 5.9%(1,367호) 증가하였으며, 중소형(85㎡ 이하)은 소폭 감소함(60㎡ 이하 : 1.2%, 60~85㎡ : 1.4%).
 - 최근 전체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과는 달리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140.9%), 민간 부문(10.3%), 85㎡ 초과(55.6%)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전년 동월 대비 기준).
 - 수도권 증가분(1,887호)의 대부분은 경기 지역에서 증가(서울 345호, 인천 419호, 경기 1,123호) 하였으며, 특히 용인시(423호)와 남양주시(252호)에서 많은 물량이 증가함.

〈미분양 주택 현황(2009년 12월 말 현재)〉

(단위 : 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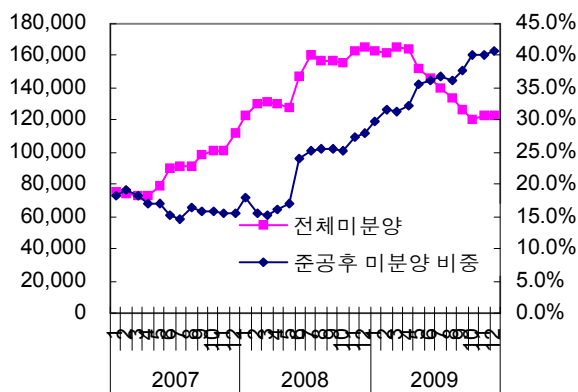
	전체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					
	2009.12		전월비		전년 동월비		2009.12		전월비		전년 동월비	
	주택수	비중	증감량	증감률	증감량	증감률	주택수	비중	증감량	증감률	증감량	증감률
합계	123,297	100.0	755	0.6	-42,302	-25.5	50,087	100.0	1,012	2.1	3,611	7.8
수도권	25,667	20.8	2,802	12.3	-1,261	-4.7	3,226	6.4	345	12.0	1,887	140.9
지방	97,630	79.2	-2,047	-2.1	-41,041	-29.6	46,861	93.6	667	1.4	1,724	3.8
민간부문	122,962	99.7	885	0.7	-41,331	-25.2	50,074	100.0	1,010	2.1	4,669	10.3
공공부문	335	0.3	-130	-28.0	-971	-74.3	13	0.0	2	18.2	-1,058	-98.8
60㎡이하	5,851	4.7	1,426	32.2	-1,443	-19.8	3,378	6.7	-40	-1.2	-747	-18.1
60 ~ 85㎡	47,834	38.8	2,862	6.4	-22,090	-31.6	22,091	44.1	-315	-1.4	-4,437	-16.7
85㎡초과	69,612	56.5	-1,428	-2.0	-18,769	-21.2	24,618	49.2	1,367	5.9	8,795	55.6

자료 : 국토해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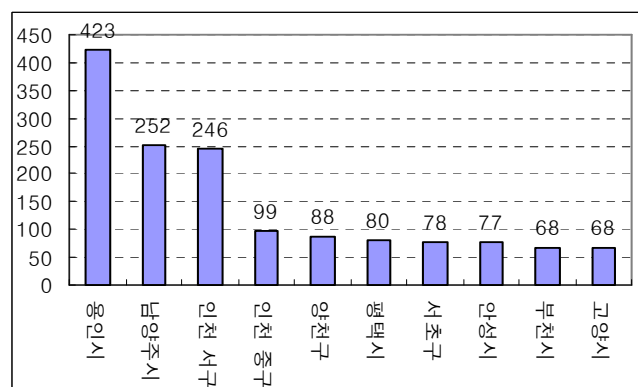
■ 전체 미분양 주택의 40.6%가 준공후 미분양

-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전체 미분양의 40.6%에 달해 미분양 주택이 10만호를 넘어선(2007. 10) 이래 최대 비중을 보임.
 - 외환위기 직후에는 전체 미분양 중 준공후 미분양 주택 비중이 약 20% 수준을 보임.
 - 미분양 통계 작성 이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최대 비중을 보인 시기는 2002년 7월로서, 1만 1,733호 47.8%를 점유. 이는 현재(2009.12)의 약 1/5 수준임.
 - 그 동안 지방에서만 증가했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에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주택업체로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작성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3년 미분양 주택 추이〉



〈2009년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최대 증가 지역〉



자료 : 국토해양부.

엄근용(연구원·kyeom@cerik.re.kr)

“각종 규제 완화해 경색된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해야”

-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 분석 및 시장 정상화 방안 도출 -

■ 전방위적 규제 지속시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속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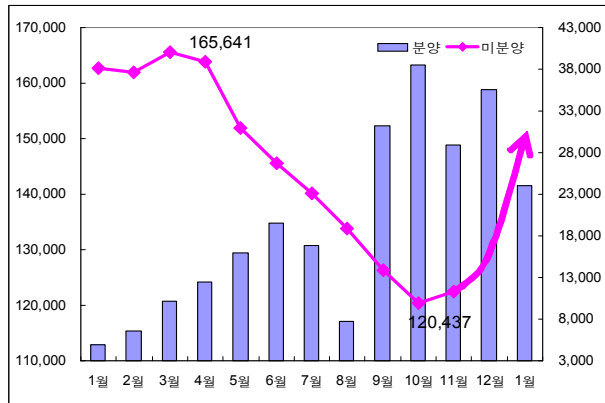
- 각종 금융 규제와 한시적 세제 혜택의 종료 도래, 지지부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에 대해 전방위적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
 - 수도권 전역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강화되어 은행권과 비은행권에까지 시행되고 있음.
 - 2010년 2월 11일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및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도 연내 종료될 예정임.
 -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폐지 또는 일부 적용 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가지 형태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및 계류 중에 있으나 입법 과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거래량 급감, 미분양 증가, 공급 감소 등 많은 문제점 양산

- 금융규제 이후 강남3구가 선행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하였으나, 가격 하락폭은 수도권 외곽이 더 크고 앞으로 거래량도 후행하여 급감할 가능성이 높음.
- 분양물량 단기쏠림으로 인해 미분양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양도세 한시 감면 종료를 앞두고 2010년 1월까지 집중된 분양물량을 고려할 때 미분양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특히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지속적인 비중 증가는 미분양 적체의 심화 외에 주택시장 침체를 가속화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대변하고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분양 증가 등에 따라 공급물량이 급감하였고, 민간부문의 부진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임(전체 물량에서의 민간부문 비중 : 1998년 57.2%, 2002년 81.4%(최고치) 2009년 55.9%).
- 주택시장의 각종 악재로 분양위험과 채무위험이 확대되면서 민간투자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PF 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한 상태에서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분양물량과 미분양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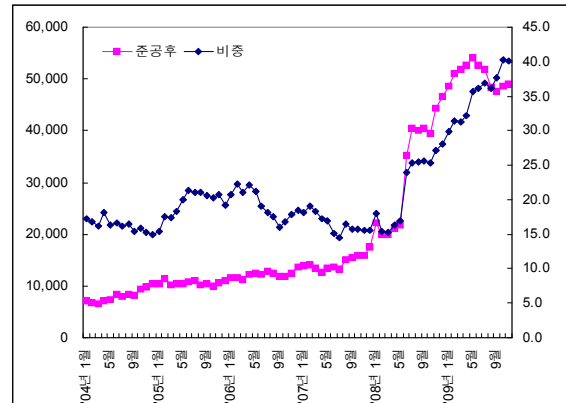
(단위 : 호)



자료 : 국토해양부, 부동산114(주)

〈준공후 미분양 물량과 비중 추이〉

(단위 : 호)



자료 : 국토해양부

■ 신규주택시장과 재고주택시장 간 선순환 구조 환경 조성 필요

- 신규주택시장에 대한 급속한 변화는 재고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쳐 전체 주택시장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상호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원활한 재고주택의 처분이 이뤄져야 분양시장도 회복이 가능할 것임.
- 현재의 금융, 세제 정책들은 신규주택과 재고주택간 순환과정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정책간 조율을 통해 시장 내부적 순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양도세 한시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분양시장의 단기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등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DTI 등 금융규제는 매매가격의 하락 및 거래량 급감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서울 제외)에 대해서 완화(환원)조치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반시장적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간의 조율 및 범위 조정을 통해 단계별로 폐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택지 조성방식과 주택규모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분은 제외

두성규(연구위원·skdoo@cerik.re.kr)

허윤경(연구위원·ykhur@cerik.re.kr)

“2030년에는 세계 3대 원전 강국으로 도약”

– 정부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 수립,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 의지 천명 –

■ 2030년까지 원전 80기 수출, 신규 원전 건설시장의 20% 점유 계획

- 지난해 연말 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정부는 최근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수립하여 원자력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원자력산업이 자동차반도체조선 등에 이은 가장 유망한 차세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
 - 정부는 2012년까지 12기, 2030년까지 80기의 신규 원전 수출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 시장의 20%를 점유할 계획으로, 그 규모는 4,000억 달러 수준임.
- 세계원자력협회(WNA)는 2030년까지 430여 기의 신규 원전 건설로 약 2,500조원 규모 이상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2009. 10)
 - 또한, 2050년까지 신규 건설해야 할 중소형 원전이 500~1,000기에 달할 것으로 예상 (미 DOE/GNEP, 2007)
 -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총 436기) 중 234기(54%)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상황 이어서 원전 운영 및 정비시장의 규모는 총 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국형 원전은 건설 및 운영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원전 이용률(2008년 기준) : 한국(93.3%), 미국(89.9%), 프랑스(66.7%), 일본(59.2%)
 - 건설공기(개월) : 48(일·ABWR1315), 52(한·OPR1000), 57(미·AP1000)
 - 건설단가(\$/kW) : 2,300(한·APR1400), 2,900(프·EPR), 2,900(일·ABWR1315)

■ 국가별 맞춤형 수출 추진 계획 등 중점 추진

- 신규 원전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원전 수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운영 및 정비 시장에서는 단위 설비개선 및 정비기술 수출을 추진함.
 - UAE 원전과 같은 EPC 턴키사업은 정부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수주를 지원하며, 건설 물량은 많으나 플랜트 수출의 제약 요인이 존재하고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자재 및 용역 수출에 주력

- 원전 도입 기반이 취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한국형 원전 진출 기반을 조성
- 핵심 원전 기술의 자립화와 원전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 3대 핵심 기술(원전설계코드·원자로냉각재펌프·원전제어계측장치)과 신형 원자로 (APR+)를 개발하고, 원전 수명 연장(60년→80년) 및 공기 단축(52개월→36개월) 추진
 - 원자력 관련 공기업(한전·한수원·한전기술·한전연료·한전KPS)의 원전 수출 및 R&D 인력의 즉시 충원 시행
- 원전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전 핵심 기자재 공급 역량을 확충
 - 국내 원전 및 해외 원전 수출에 소요되는 원전 연료(우라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우라늄 광산의 인수와 국내 및 해외 농축성형가공 공장의 확충
 - 원자로 설비 공급 업체와 중소 기자재 업체간 상생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외국 우수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급 능력 확충

■ 원전 수출전략화 정책의 시사점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수출산업화 전략’은 원전 건설사업을 해외 수출 육성 산업으로 선언한 것이며, 또 대표적인 녹색건설 건설상품으로 평가한 것임.
 - 한국은 세계 원전시장에서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 건설사업의 풀 패키지 서비스 (full-package services)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가진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자(engineer)와 일부 공종의 건설 숙련공(skilled labor)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 공급 대책 수립이 필수적임.
 - 유사 건설사업의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형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조기 시행 필요
- 세계 원전 건설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공기업 중심의 원전 수출전략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원전 수출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내 건설기업의 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한 시점임.

이영환(연구위원·yhlee@cerik.re.kr)

오바마 행정부 금융개혁안-겸업 제한 등 강력 규제

- 미 의회 통과시 우리나라 금융 정책에도 영향 미칠 듯 -

■ 오바마 행정부 금융개혁안 발표...금융기관 규모 제한 포함

- 지난 1월 21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업무와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업무의 겸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안을 발표
 - 개혁 내용에는 금융기관의 규모와 금융기관의 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930년대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최대 규제로 평가됨.
- 이 개혁안은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이 주도하고 있는 은행 규제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33년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으로의 일부 회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됨.

■ 「글래스스티걸법」의 주요 내용

- 글래스스티걸법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금융 규제법임.
 - 1933년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은 상업은행의 증권 업무 영위 금지(제16조), 투자은행의 은행 업무 영위 금지(제21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계열 관계 금지(제20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원 겸직 금지(제32조)를 규정하고 있음.
 -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사내겸영은 물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계열 관계를 맺는 것도 금지하였고, 이처럼 엄격한 전업주의는 1999년 Gramm-Leach-Bliley Act(이하 GLB법)가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음.
- 그러나, GLB법은 글래스스티걸법의 제20조 및 제32조를 폐지한 것이며, 제16조와 제21조는 여전히 유효함. 즉,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계열 관계 구축 및 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이 증권 업무를 사내에서 겸영하는 것은 금지되었음.
 - 그 결과 현재 미국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상업은행 자회사와 투자은행 자회사를 별도로 두고 겸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상황임.

■ 개혁의 대상은 은행지주회사

- 오바마 금융 개혁안의 핵심은 ‘상업은행과 상업은행이 포함된 금융그룹’, 즉 은행 지주 회사에 있음.
 - 즉, 상업은행은 물론 상업은행과 계열관계에 있는 투자은행은 헤지펀드(hedge fund) 및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투자·운용이 금지되며,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프랍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도 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미국에서는 상업은행이 증권업을 사내 경영할 수 없으며, 상업은행에 대한 자산 운영 규제도 매우 엄격함.
 - 오바마 개혁안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계열 관계는 허용하되, 상업은행 계열 투자은행이 고위험 증권업무를 수행할 여지를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업은행 계열 투자은행의 증권업무를 제한하는 이유는 고객의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상업은행 활동은 금융당국의 감독과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투자은행 업무까지 보호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임.

■ 미 의회 통과시 우리나라 금융정책에도 영향 미칠 듯

-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 개혁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나 만약 의회를 통과한다면, JP Morgan Chase, Goldman Sachs 등과 같은 금융기관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분리시켜야 하고, 프랍 트레이딩 업무를 중단해야 함.
 - 이들 대형 금융기관이 자회사나 회사 내부에 갖고 있던 헤지펀드, 사모펀드, 프랍 트레이딩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들은 그 동안 전세계 시장에 다수의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와 같은 금융기관 규제 방침이 국제적인 논의 대상이 되면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예를 들어, 미국의 금융기관 규모의 제한 움직임은 국내 은행권의 인수합병이나 민영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

* 고객 예금이 아닌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에 의존하여 위험도 높은 각종 금융 거래를 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2.9	K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 라디오 방송 시사프로그램 인터뷰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주택부동산시장 동향과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 종료의 시장 파급 효과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 소관 부담금 관련 검토 실무작업반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강운산 연구위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부담금 부과율의 적정성 및 부과율 인하 검토
2.11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정책과 주최 EWS지표점검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주요 주택·부동산 지표 및 전세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정책관실 주최 ‘시공책임형 CM 관련 간담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장철기 연구위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관련 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의에 앞서 CM at Risk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

■ 연구원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규제 및 한시적 세제 혜택 종료 도래, 지지부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에 대해 전방위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규제에 의한 복합적 파급 효과가 거래량 급감, 미분양 증가, 공급 감소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 ■현행 주택시장 규제 정책은 신규주택시장과 재고주택시장에 대한 이원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시장간 순환 과정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재고주택을 보유한 소유자가 신규분양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재고 주택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양도세 한시 감면을 연내까지 연장하여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매매가격의 하락과 거래량 급감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서울 제외)에 대해서 금융규제 완화조치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무과정’ 개설

- 개설목적 : 건설업체, 유관기관 등 부동산 및 SOC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금융자본을 조달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능력 배양 지원
- 교육일시 : 2010. 2. 23(화)~25(목), 총 3일간 24시간
- 교육장소 :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교육대상 :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 등 부동산 및 SOC사업 실무자
- 문 의 : 연구원 홈페이지 혹은 기획조정실 교육팀(Tel. 02-3441-0671 ~2)

“원전 숙련기능공 양성 서두르자”

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우리나라 원전 건설시장은 낙관적 전망 일색이다. 지경부가 1월 13일 대통령께 2030년까지 해외 원전 80기 수주 계획을 보고하는 등 희망찬 모습이다. 그런데 정작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주무부처는 조용하다. 대다수 건설회사들도 강 건너 불구경식이다.

2030년까지 80기의 해외 원전을 수주한다는 것은 국내 업계의 능력으로 매년 평균 5기를 완공해 간다는 뜻이다.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 관리 및 기능인력 수급문제다. 당장 UAE 원전을 공기 내 완공하는 데는 국내 관행적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다.

원전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목건축인력과 기계전기 인력과의 비중은 약 4:6 정도다. 토목건축분야 기능인력은 목수와 비계, 철근 및 철골이 핵심이다. 기계전기부문에서는 배관, 용접, 기계 및 전가통신 인력들이다. 지식이나 경험만이 아닌 일정한 자격기준 시험을 통과해야만 책임기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유는 시운전단계 혹은 운영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품질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엄청난 비용 지불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과급 영향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한 시공이나 혹은 경험 미숙에 의한 완성도 저하는 해결에 수개월씩 소요되는 게 보통이다. 금융비용만 수천억원에 달하기도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준공 시기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의 전력에너지 수급계획에 의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좀처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게 현실적 제약이다. 따라서 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적인 석유화학플랜트공사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UAE 원전 계약에서 공기 지연 시 부과되는 지체상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공기 준수를 위해서 한전이 사업관리자(PM)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에서 당장 전문인력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숙련기능공 양성은 당장의 현안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몫이다. 기타 플랜트 공사처럼 숙련도 및 완성도가 떨어지는 제3국 인력이 아닌 심장급은 물론 핵심공종의 경우 작업조별 책임자급은 국내에서 검증된 인력을 투입하는 전략으로 가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별 기능인력 양성이 아닌 작업조를 거느리는 핵심공종별 전문공사업체를 사전에 지명하여 양성하는 체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세계원자력기구(IAEA)의 전망대로 2050년까지 1,000기의 원전 수요가 있다면 시장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 기반을 당장에 확충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 몫이 바로 건설산업의 책임인 것이다. <코스카저널, 2010. 01. 25>

이복남(연구위원·bnlee@cerik.re.kr)